혁신안 통과, 지역 의원들 '입장차+온도차'

친노·주류 "만장일치 처리 다행…당 화합 강력조치 필요"

비주류 "힘으로 밀어붙이기 분노…문대표 백의종군을"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에서의 혁신안 통과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친노·주류 성향 지역 국회의원들은 혁신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주류·중도 성향 지역 의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단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지만 혁신안 통과 절차와 내용, 대표의 재신임 연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무늬만 만장일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김동철, 권은희, 황주홍, 박주선, 박혜자, 김승남 의원 등은 중앙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거나 아예 불참했다. 주승용, 김영록, 장병완 의원 등은 중앙위에 끝까지 참석했지만 주류 진영의 밀어붙이기식의 혁신안 처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혁신안 처리 절차와 과정이 적절치 않았으며 혁신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부족하고 대표의 재신임 연계 등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비주류 진영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혁신위 종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원회가 고성이 오가는 혼란 속에 끝났다. 당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 혁신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주류 진영에 대한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새정치연합 중앙위에서 주류는 몰아치고 비주류는 초라했다"며 "왜 대표 재신임까지 걸어 국민과 당원을 둘로 가르는 선택을 강요하나"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의 결단만이 당을 구하고 분열을 막습니다.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고 강조, 혁신안 처리 이후, 문 대표의 백의종군 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중도 성향의 장병완 의원은 "중앙위에서 혁신안 처리가 날치기는 아니지만 당이 스스로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혁신안과 대표 재신임 연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모 초선 의원은 "혁신안 통과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중앙위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며 "들러리를 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반면 김성곤, 강기정, 우윤근 의원 등 친노·주류 성향 의원들은 혁신안이 큰 문제없이 처리된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의원은 "커다란 충돌 없이 혁신안 처리가 만장일치로 처리돼서 다행"이라며 "통합위원회 구성 등 당의 화합을 위한 보다 강력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도 성향의 신정훈, 이개호, 임내현 의원 등은 중앙위 혁신안 처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불가피한 과정이고 혁신안과 재신임 연계는 적절치 않다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주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어 혁신안 처리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정쩡한 위치"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안 처리를 두고 지역 정치권도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는 것 같다"며 "문 대표가 혁신안 처리 이후, 어떠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느냐가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혁신안 표결 공개 토론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혁신안 표결을 위한 비공개 토론에 들어가기 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개혁 입법전쟁 점화

여, 연내 국회처리 방침…야, 대타협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새누리당은 16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 오후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이 노동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 태세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야당에 노동개혁 입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 논의에 응하되,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강행방침은 IMF 사태를 초래한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강행처리와 유사하다"면서 "강행 처리는 잘못된 방법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우리 당도 입장을 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균형잡힌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권주자 친박도 있소"

윤상현 의원, 최경환 부총리·유기준 장관 거론 김무성 견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이면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고 나서면서 여권의 대권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며 "야권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무성 불가론'으로 해석됐다. 특히 윤 의원은 친박 대선 후보론까지 직접 제기했다. 윤 의원은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남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충청의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밖에서는 꾸준히 여권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돼온 충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설도 있다. 게다가 여권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총리도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구체적으로 계파·지역·선수를 거론해가며 대선 후보감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차기 구도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외공관 국감 차 필리핀에 체류 중인 윤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후보군을 다원화시켜야 하고 김 대표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 대선후보 불가론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올해도 '국감 무용론'

내용 부실·고성·막말 되풀이…野, 당 내분에 활동 저조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감이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용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으며 고성과 막말, 피감기관과 증인을 죄인 다루는 듯한 고압적 태도 등 예년과 같은 불편한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동개혁,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등 정쟁 거리가 메인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국감 시작 전 '민생국감'(새누리당), '4생 국감'(새정치민주연합) 등 민생을 앞장세웠던 여야의 다짐은 공허한 구호가 돼 버렸다는 비판이다.

또 경찰 총수에게 장난감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하고, '코뿡'과 같은 '셀프 성형도구'를 소개하며 시선 끌기에만 경쟁적으로 나서는 양상이다. 더욱이 동료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아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비하하고, 피감기관장에게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수준 이하의 발언도 잇따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국감이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역대로 국감은 '야당의 무대'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올해 새정치연합은 주류·비주류 간 계파갈등이 격화되면서 예년처럼 국감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표가 공천혁신안의 의결을 자신의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국민과 당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언급하면서 국감에 대한 야당의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있다 보니 의원들이 튀는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며 "또 어떤 의원들은 국감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수준 높은 국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